

서유럽 통화통합과 자유은행제도

이 지 순

유럽 경제공동체에서는 금세기 안에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완수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경제통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 통화통합의 문제인데 이에 관해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고, 유럽중앙은행이 발행한 단일통화로 기존의 각국 통화를 대체하며, 유럽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역내 단일통화 공급 및 금융정책에 관한 최종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국이 그 국가 영토내에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제도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통화통합 노력을 이제까지 역내 통화 간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환율조정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외에 별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각국이 지니고 있는 통화주권을 포기하기 힘든데 기인한다. 나라마다 처한 형편이 달라 각국이 지니고 있는 통화주권을 포기했을 때 입게되는 손의 계산이 큰 차이가 나므로 중앙은행제도를 채택하기 힘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통화통합 노력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개관하고, 그동안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통화통합의 보다 나은 방법은 경제통합을 위해 독점력을 지닌 중앙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화폐를 상호 경쟁시키는 자유은행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I. 개 관

20세기초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기존의 국경을 초월하는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자는 법 유럽주의를 주창한데서 비롯된 유럽통합의 이상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 최초의 움직임이 1952년에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다. 이는 석탄과 철강자원에 관한 독일과 프랑스간의 오랜 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참여국들이 석탄 및 철강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목적을 지닌 협의체였다. ECSC는 그러나 유럽지역이 지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회원국들은 1957년에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58년에 유럽경제공동체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한편 당시 EEC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들 중 서유럽국가들은 1960년에 영국의 주도하에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EFTA)을 결성하였다. 이는 회원국들 상호간에 무역장벽을 낮춤

으로써 자유무역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지닌 협의체였다. 또한 2차 대전 후 소련의 영향권안에 들어가게 된 동유럽 국가들도 이미 1949년에 상호경제원조회의(Council of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을 결성한 바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경제동맹을 공고하게 하려는 조직체였다.

이로써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경제적으로 보아,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상호경제회의 등 삼대 권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로마조약에 의해 1958년에 탄생한 EEC는 1967년에 ECS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1958년 창설)를 합병하기로 하는 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68년 7월에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로 확대 개편되었다. EC는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관세동맹을 실현하고 통화통합의 기초로서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를 창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후 회원국의 수도 들어나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서유럽공동체가 되었다. 현재 EC의 총 회원국은 12개국이다.

EC의 활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역내국가간의 경제 및 정치통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1992년까지 역내시장을 단일화하는 경제통합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이다. 이에 더하여 1990년대 중 서유럽 국가들을 명실상부한 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작성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역내국가의 결속과 함께 EC는 EFTA와 1992년 말까지 양 시장을 통합하여 유럽경제지역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동구권국가들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발 맞추어 COMECON해체로 구심점을 잃은 동구국가에 대해서도 EC회원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동서유럽을 총괄하는 하나의 유럽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통합은 단지 EC 12개국의 결합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기존의 EFTA국가와 COMECON국가까지를 포함하는 거대한 범 유럽경제권으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지닌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와 이상을 지닌 유럽통합이 최근에 들어 와 큰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본격적인 유럽통합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회원국의 찬반투표에 부쳐져 이미 덴마크에서는 부결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겨우 통과되었다. 이는 역내 국가 주민들이 유럽통합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는 반증이 되어 유럽통합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유럽통합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통화통합은 현재까지 전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원국 중 참여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환율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환율에 관한 공동보조정책을 폐고 있으나, 이 역시 최근에 이르러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깨어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유럽통합은 관세장벽의 철폐라든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같은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통화정책의 상호조정 및 협조라는 측면에서는 별 진전

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통화통합상의 어려움이 그대로 두면 기왕의 경제통합이 가져온 성과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통합을 특히 통화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의 진척상황을 조사해 보고,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 본 다음, 통화통합의 대안으로서 자유은행제도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한다.

II. EC 통화통합의 진척상황

EC 제국들은 80년대에 들어와 역내시장기반을 미국, 일본 및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게 잠식당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대응책으로 EC의 경제적 통합을 앞당겨야한다는 인식하에 EC 국가들은 일련의 시장통합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겨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통화체계(European Monetary System)로 대표되는 협행의 유럽 통화제도하에서 는 EC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적 통합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어 EMS를 대신할 새로운 유럽통화제도의 창출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논의의 일차적인 성과가 들로르 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다.

들로르 보고서는 통화통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제 1 단계로서 역내 회원국 통화간에 항구적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여 이를 정착시키고, 제 2 단계로서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며, 궁극적으로 제 3 단계에 이르러 단일통화를 유통시키는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는 이러한 논의의 제 1 단계를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환율조정 메커니즘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럽 통화위기에서 보듯이 통화통합의 제 1 단계가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전된 통화통합의 실상을 조사해 보기로 하자.

1. 초창기의 통화통합 시도

유럽경제통합은 1957년의 로마조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화통합에 관한 논의는, 그러나,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 특히 로마조약중에서 통화관련조항인 제 104 조 내지는 제 109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로마조약 제 104조를 보면 각 가맹국은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와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균형확보에 주력하면서 자국통화의 신용유지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수행함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105조는 위의 조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간 및 중앙은행간의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EEC 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해 동 협력관계의 실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공동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가맹

국간 통화정책의 조정을 피하기 위해 자문기관인 통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가맹국 및 공동체의 통화금융동향과 지급결제제도를 조사하고 그 의견을 작성해서 EEC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 104조와 105조의 규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초기의 경제통합논의는 회원국이 적어도 통화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마조약 제 107조를 보면 각 가맹국은 환율정책을 공동체의 이익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맹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EEC 위원회는 통화위원회와 협의하여 여타 가맹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공동행동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마조약 제 109조는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가맹국은 그 보전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물론 가맹국이 국제수지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EEC 위원회 및 여타 가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EEC 이사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화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다수결로 동 보호조치의 변경, 일시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60년대에 들어와 당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관세동맹 및 농산물가격단일화와 관련하여 환율안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국 간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4년에 중앙은행총재회의를 구성하여 환율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간에 상호협력키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또한 60년대까지는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금본위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근간을 형성하였으므로 지역통화체제의 필요성도 크게 인식되지 않았었다.

70년대에 들어와 금본위제를 중심으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자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불안이 크게 대두되어 그 대안으로서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EC 지역내의 관세동맹이 완성되어 한 단계 더 높은 경제통합의 욕구도 높아졌다. 이러한 역내외적 경제사정을 배경으로 해서 1970년 8월에는 자본이동의 자유화, 역내통화의 단일화, 유럽중앙은행제도의 도입 등을 내세운 베르너 보고서가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베르너 보고서에 기초해서 1971년에는 소위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이 결성되었다. EMU의 중요임무는 각국의 환율결정에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EMU는 실세 외환시세를 토대로 해서 역내통화의 평균 대미 달러환율을 나타내는 공동체 수준의 환율을 계산한 다음, 각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변동폭이 공동체 수준 환율의 상하 0.6%에 다나를 때 각국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으로 환시장에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내통화간의 환율변동폭을 IMF가 허용한 3% 보다 낮은 수준에 유지시키는 조치로서 통화통합에 보다 근접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동맹은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로 국제통화제도가 위기를 맞아 역내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되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제통화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각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기로 한 스미소니언 체제가 성립된 직후인 1972년 4월에 베르너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바젤 협정이 EC국 중앙은행총재간에 체결되었다. 바젤협정에 의해 환율관리방식으로 스네이크 체제가 출범되었으며 또한 1973년에는 유럽통화협력기금(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이 설립되었다. 스네이크 체제는 가맹국통화의 대미 환율변동폭을 상하 2.25%내에서 운영하며 가맹국통화 상호간에도 최강세 통화와 최 약세 통화간의 대미 환율격차를 최고 2.25%이내로 유지하는 환율관리체제를 의미한다. 스네이크 체제는 출범과 거의 동시에 문제에 봉착하였다. 1972년 6월 영국과 아일랜드가 스네이크 체제를 탈퇴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이탈리아도 이탈함으로써 독일을 중심으로 한 미니 스네이크 체제로 전락하였다.

70년대를 거치면서 스네이크 체제와 스미소니언 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킹스턴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화통합을 위한 노력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가 발족됨에 따라 현재는 이 체제하에서 통화정책상의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EMS는 유럽통화단위(ECU)를 창출하여 EC 통화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약세통화에 대해 차별적 환율변동폭의 운용을 허용하고 외환시장개입을 위한 조기경계지표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중 단기 신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 EMS의 운용현황

(1) ECU의 창출 및 활용

ECU는 유럽공동체에 참여하는 12개국의 화폐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의 단위이다. 가맹국통화에 대한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며, 역내 정부 간 그리고 EC기구와의 거래 시 공식적인 계산단위 및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종화폐가 ECU인 셈이다. ECU가 계산단위 및 결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는 IMF의 SDR과 비슷하지만 회원국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 및 달러 준비자산의 각 20%를 유럽통화협력기금에 예치하는 대가로 ECU를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예탁금은 매 3 개월마다 갱신되는 스왑 방식에 의해서 예탁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EMS 발족 당시 자국의 대외준비자산의 상당부분을 EMCF라는 초국가적기관에 완전히 넘겨주면 각국이 지닌 통화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EMCF는 예탁된 금이나 달러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

ECU 바스켓의 구성비는 역내교역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 GDP, 단기 신용공여 및 차입실적, EMCF에의 예탁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재조정한다. 1989년 9월

20일에 조정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ECU가 산정 된다.

$$1 \text{ ECU} = 0.62\text{DM} + 0.088 \text{B.Pound} + 1.332\text{FFr} + 151.8\text{Lira} + 0.22\text{Gilder} + 3.301\text{Bel. Fr} + 0.13\text{Lux.Fr} + 0.198\text{Krone} + 0.0086\text{Ireland Pound} + 1.44\text{Drakma} + 6.89\text{Peseta} + 1.39\text{Esqudo}$$

ECU는 그 창출방법의 특수성 때문에 EMS 가맹국 중앙은행, 유럽개발은행, 유럽원자력위원회, 유럽개발기금 등 EC기구에 한에 그 보유가 인정되는 등 유통이 크게 제약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에 EC 중앙은행총재회의의 결정에 따라 EMCF의 승인을 받은 EMS 비 가맹국 중앙은행도 ECU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ECU는 주요 역내금융시장에서 상업은행에 의해 국제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은행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 예금과 대출 그리고 ECU표시 채권발행등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ECU표시 채권발행은 특히 최근에 들어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와 관련된 결제에 ECU가 사용되는 경우는 아직 극히 드문 실정이다.

(2) 환율조정기구(ERM)

EMS체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역내 통화간의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EMS체제는 환율조정기구인 ERM의 한 방법으로 스네이크제도를 보완한 예비 개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맹국 상호합의하에 각 통화의 대 ECU 중심환율과 각 통화상호간의 기준 환율을 설정한다. 다음 기준 환율의 상하 2.25%를 환율변동의 최대 허용폭으로 정하여 자국통화의 환율이 이 한계수준에 도달한 경우 해당 국 통화당국은 외환시장에 무제한적으로 개입하여 환율변동을 방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패리티 그리드 방식에 의한 환시장개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개입정책을 너무 엄밀하게 적용하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괴리지표에 의한 예비적 개입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괴리지표란 각 통화의 대 ECU환율이 ECU 중심환율로부터 괴리된 정도를 당해 통화에 대해 설정된 최대괴리폭과 대비한 수치를 말한다. 괴리지표가 75%를 넘을 경우 당해 통화당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국내통화정책을 변경하거나 대 ECU 중심환율을 변화시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타 가맹국에 그 이유를 설명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EMS 가맹국간의 의무적 또는 예비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을 허용 폭 이내로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통화의 ECU에 대한 중심환율과 변동 상 하한폭을 재조정하게 된다.

(3) 신용 공여 및 결제방식

가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다른 나라 중앙은행으로부터 초 단기 신용공여 제도를 통해 무제한적으로 차입할 수 있다. 환시장개입을 위한 신용거래는 모두 ECU를 사용한 EMCF의 계정 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통상 개입이 시작된 75일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무국이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3개월 그리고 채권국이 동의하면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ECU에 의한 결제로 채무국의 ECU보유액이 감소되어 보유액의 월중 평잔이 스왑 이행시의 보유액을 하회하게 되면 채무국중앙은행이 채권국중앙은행에게 이자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신용제도에는 초 단기 신용제도 이외에도 3개월 만기의 단기신용제도와 2년지 5년 만기의 중기신용제도가 있다. 단기신용은 채무국의 요청에 따라 3개월씩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지만 중기신용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4) EMS의 성과 및 문제점

EMS는 가맹국통화간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가맹국간의 경제력격차를 축소함으로써 EC 통화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의 운영성과는 과연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가?

ERM 참가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EMS가 역내국의 통화가치안정에 기여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맹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1979년에는 8.2% 였으나 1989년에는 3.6%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가맹국간의 인플레이션의 격차도 같은 기간 중 10% 포인트에서 3.5% 포인트로 작아졌다. 인플레이션이 하향평준화된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서독이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펴 온 것이 크게 주효하였다.

가맹국들의 물가안정에 힘입어 환율변화 역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1987년 2월부터 1990년 4월 사이에 가맹국들의 대미환율변동의 변화계수는 5% 내외에 그치고 있음에 비해 가맹국이 아닌 영국 파운드 화의 대미 환율변화의 변화계수는 같은 기간 중 17.2%에 이르렀음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MS가 단일 통화권 형성으로 발전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당초 EMS 발족 후 2년 이내에 설립하기로 하였던 유럽통화기금이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유럽통화기금 EMF가 아직까지 발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는 그러한 기구를 대체할 경쟁질서도 성립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일정한 규범하에서 회원국통화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도 갖추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중앙은행이 성립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더 문제인 것이다.

둘째, EC의 전 회원국이 ECU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ERM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다수 있고, 또 스페인의 경우 환율변동폭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하 6%까지 허용하여

회원국간의 형평성과 ECU가치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서독의 경제력과 통화정책의 영향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통일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의 마르크 화가 유럽의 단일통화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마르크 화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마르크 화가 단일통화가 되었다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ECU의 사용이 아직도 제한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CU가 중앙은행간에 3개월 스왑 거래에 의해서 창출되어 공급이 신축성을 결여한데다, 그 가치가 금 및 달러의 시세변동에 따라 좌우되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마르크 화가 국제통화로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구태여 ECU를 널리 사용할 유인을 지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ECU의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ECU는 아직도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다.

3. 최근의 통화통합에 관한 논의

(1) 새로운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

EMS는 창설이래 역내 환율안정에 기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가맹국 중 가장 경제력이 큰 독일의 통화정책방향이 EMS 체제의 방향을 좌우한 관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놓기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특히 독일의 저인플레이션정책이 EMS를 통해 약세통화국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경제의 장기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와 EC의 산업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역내시장이 미국, 일본 및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에 크게 잠식당하게 되었다. 이에 공동대처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통합과 통화통합에 대한 요구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EC 위원회는 이러한 회원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1985년 6월에 역내시장통합을 완결하기 위한 백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백서는 1987년에 단일유럽의정서로 채택되었다. 이로서 로마조약으로는 불충분하던 경제 통화통합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1987년과 88년에는 60년대 초반 이래 중단되었던 역내자본이동에 관한 제 3차 및 제 4 차 지침을 마련하여 1991년 7월까지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 12월에는 단일은행면허제도의 도입, 겸업주의의 허용, 역외은행에 대한 상호주의원칙의 적용 등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제 2 차 은행지침을 마련하여 금융통합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전개로 1992년 말을 목표로 하여 추진된 상품, 씨어비스, 노동력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통한 공동시장의 기반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진전과 더불어 EMS 운영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던 통화통합에 관한 논의

도 다시 활발히 전개되게 되었다. 특히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환 투기의 위협이 커졌는데 이를 제어할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EMS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1988년 1월 EC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들로르에 의해 역내시장통합에 부응한 EMS의 개혁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서독과 프랑스의 관련당국자간에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창설 및 단일통화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EMS 개혁한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영국이 통화주권의 침해라는 견해를 보여서 통화통합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대신 들로르를 의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기로 하였다.

(2) 들로르보고서

들로르 위원회는 1989년 4월 유럽공동체에서의 경제 및 통화동맹을 위한 3 단계 실천방안을 발표하였다. 들로르 보고서는 경제통합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통화통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의 목표를 보면, 상품, 써어비스, 노동력 및 자본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공동시장의 토대위에 각국의 정책을 공동관리하는 지역통합체의 일부로서 각국통화간의 자유교환성이 보장되거나 단일통화가 유통되는 통화지역의 창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화영역이 성립되려면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시장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1992년 말까지 완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화동맹의 관건은 과연 역내국가간에 고정환율제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게 되었다.

역내통화간에 고정 환율이 유지되려면 회원국 통화의 상대가치가 지속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화폐가치의 지속적인 안정을 달성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통화간의 경쟁을 통해 통화가치의 안정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통화간에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하에서는 실질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한 통화는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므로 각 화폐의 발행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통화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유인을 지니게 된다.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도 역내 각국이 발행하는 화폐를 모두 통용하도록 하고 역내주민이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마음대로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통화는 도태될 것이므로 각국의 통화당국은 자국통화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만큼만 통화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시장경쟁이 통화 공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되어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어떤 중앙기구의 의도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기구가 자율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가져온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장경쟁에 의해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달성되면 통화간의 환율도 자동적으로 균형수준에서 안정화된다.

역내 통화간의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통화정책을 중앙집권화된 단일 기구가 전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이 공동체의 통화정책을 총괄한다면, 역내통화간의 고정 환율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통화 공급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단일통화가 유통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중앙은행은 역내통화간의 고정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해 각국 화폐의 발행량을 수요에 맞추어 규제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성공한다면 역내통화간에 고정 환율이 유지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공동체주민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든지 무차별 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치 한 가지 통화만 유통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이러한 일이 가능 하려면 각국의 통화당국이 통화주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중앙은행에 의한 고정환율제의 유지는 힘들게 될 것이다.

들로르 보고서는 위의 두번째 방법을 통한 고정환율제의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들로르보고서에서는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 ESCB)를 창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것이 들로르보고서가 상정한 통화통합의 제 2 단계에 해당된다. 제 2 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해서 유럽중앙은행이 점진적으로 각국의 통화정책수행권한을 이양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 2 단계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제 3 단계에 가서 각국의 통화주권을 유럽 중앙은행에게 완전히 이양하고, 또 화폐도 유럽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단일화폐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통화통합이 완결되는 단계인 셈이다. 제 3단계에서는 또한 각국의 재정정책, 외환정책, 경쟁정책 등의 수행에 관해서도 엄밀한 준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정책 특히 재정적자에 관한 정책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통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며, 외환정책을 가맹국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통화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쟁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금융을 이용한 경쟁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한다면,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경쟁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을 따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단일통화의 창출에 관해 들로르보고서는 이를 통화동맹결성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는 않으나 권고사항으로 채택하고 있다. EC 통합을 위한 정치적 심리적 상징이 되고, 통화관리가 용이해지며, 통화 간 교환에 따른 거래비용 및 정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단일통화의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들로르보고서에 따르면 단일통화의 창출은 고정환율제로의 이행 직후에 실시하되, 통화로는 현재의 ECU를 사용하자고 한다. 이 경우 ECU는 더 이상 역내통화의 바스켓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게 된다.

들로르보고서는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EC 공통의 통화를 창출하며 동시에 각국통화와 병행해서 유통시키는 소위 parallel currency strategy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신 통화가 각국의 실물경제활동과 연계없이 발행될 소지가 있어 불가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각국의 통화정책 추진에도 혼란을 초래할 것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들로르보고서가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지 않고 대신 기존 각국통화간의 자유경쟁을 통

(표 1)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조직과 기능(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목적	통화가치안정 및 공동체의 일반경제정책 지원
2) 권한과 기능	통화, 외환, 대외준비정책의 수립과 집행 결제시스템 관리 은행감독당국과 정책협조과정에 참여
3) 정책수단	통화정책수단을 정관으로 규정함 가맹국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시장매매 가맹국 정부에 대한대출은 금지
4) 구조 및 조직	정치적 다원주의에 부합하게 연방주의로 구성 가맹국중앙은행총재 및 상근이사로 중앙은행 이사회구성 의사결정절차는 정관으로 규정함 통화동향분석, 통화정책의 집행을 관장하는 임원회설치 중앙은행이사회에서 정한 목표내에서 가맹국 국내통화정책 운용
5) 지위	가맹국정부 및 여타 EC기구로부터 독립 - 임원임기보장 유럽의회 및 EC 위원회에 연차보고 별도로 설립하는 감독기관이 업무를 감사함

해 통화통합을 달성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들로르보고서의 치명적인 결점이라 하겠다. 시장의 진화적기능에 의해 통화통합이 자생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길을 제쳐 두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다.

(3) 통화통합의 단계

들로르보고서는 통화통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제 1 단계에서 는 현재의 EC제도내에서 역내 각국 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고 더 나아가 경제여건을 동질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각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화정책에 관한 협력사항으로서는 현재 ERM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영국, 포르투갈 및 그리스의 추가적 참여를 유도하고, 스페인 페세타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상 하 6%의 환율변동폭을 다른 나라와 같이 2.5%로 축소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부문에 의한 ECU의 사용을 장려하며, EC 중앙은행총재회의의 권한과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EC 중앙은행총재회의의 기능강화방안으로는 동 총재회의가 가맹국의 통화 및 외환정

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국의 연도별 통화목표 설정에 관하여 각국 통화당국과 사전협의하여 권고하도록 하고, EMS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일반경제정책에 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체는 1990년 6월에 EC 중앙은행총재회의의 조직을 개편하여 확대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의 중앙은행총재회의가 비상설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그 산하에 12개 회원국 중앙은행의 대표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3 개의 분야별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 정책위원회로는 외환정책위원회, 통화정책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며, 이와 별도로 전문 자문기구인 경제부를 신설하여 5명의 경제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90년 6월에 열린 EC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제 1 단계조치들을 90년 7월부터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제 1 단계조치들이 완결되면 통화통합의 제 2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제 2 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제도를 창설하여, 현재의 유럽중앙은행총재회의 등 EC의 금융관련기구를 흡수합병하고, 나아가 각국의 통화신용정책권한을 점차적으로 유럽중앙은행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 통화당국이 자국내에서의 통화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지니되, 유럽중앙은행이 개괄적인 통화성장목표와 운용지침을 정하면, 각국 중앙은행은 이에 부합되는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 2 단계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지니고 있는 외화자산의 일부를 유럽중앙은행에 집중시켜서 필요시 유럽중앙은행도 외환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제도를 창설하려면 EC의 기본조약인 로마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들로르보고서는 통화통합의 제 1 단계에서 유럽중앙은행제도창설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의하고 있다. 이에 의거해서 현재 공동체회원국간에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영국을 제외한 11개국은 유럽중앙은행창설에 동의하며 그 내용도 들로르보고서의 주장과 비슷하다. 다만 외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에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들로르보고서에서는 금리와 환율의 유기적 연관성을 들어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모두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의하면 환율은 EC 재무각료이사회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ESCB가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감독권 역시 들로르보고서와는 달리 각국 통화당국이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의 조직에 관해서는 들로르보고서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상근 이사는 4인으로 하고, 이사회의장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받아 EC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과 여타 경제정책과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EC 재무각료회의 의장과 EC 위원회의 대표 1인이 ESCB 이사회에 참석하여 빌언할 수 있도록 하고, EC 위원회가 통화정책과 여타 경제정책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감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조직과 기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ESCB의 골격에 관해 영국을 제외한 회원국간에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

루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들로르보고서가 상정한 통화통합의 제 3 단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 3 단계는 각국의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이 점차 ESCB에 이관되고, ERM의 환율변동폭이 점차 축소조정되어 마침내 고정환율제로 이행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ESCB에 귀속되고, ESCB에 의해 역외통화에 대한 외환시장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공적 외환보유고의 집중제가 실시되며 마침내 역내 단일통화가 창출된다. 이렇게 되면 유럽통화통합이 완결되게 될 것이다.

들로르보고서는 이 외에도 각국의 일반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의 집행이 통화정책의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에 관한 구속력 있는 준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들로르보고서는 통화통합의 완결을 위해서는 로마조약의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조약을 작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4. 통화통합논의에 관한 회원국의 상이한 대응

EC 통화통합에 관한 들로르보고서가 발표되고 각 회원국이 동 보고서의 제 1단계조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화통합의 제 2 단계 및 제 3 단계에 관한 논의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화동맹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들로르보고서는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여 단일통화를 유통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회원국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통화통합과 더불어 통화정책에 관한 주권은 물론, 재정정책, 외환정책 등에도 상당한 견제가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회원국의 이해가 맞물려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견해가 서로 대립되고 있어 통화통합이 더 이상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1) 영국

영국은 들로르보고서의 제 1 단계까지는 준수할 의사를 갖고 있어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EC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정되고 외환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랑스와 이탈리아가 외환자유화를 완전하게 실시하면 영국도 ERM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제 2 단계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각국에 대한 주권침해의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통합 제 2 단계 및 제 3 단계에 관한 독자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 통화통합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순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안에 따르면 들로르보고서의 제 1 단계조치가 실현되어 EC 전 회원국이 동등한 조건으로 ERM에 참여하고 예정대로 상품, 씨어비스, 노동력 및 자본의 자유이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시장이 형성되면, 제반 시장에서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하여 각국간의 통화정책이 상호조정 수렴되고 인플레이션격차도 점차 축소되어 환율의 평가재조정이 필요없게 될 터이므로, 통화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인위적인 제도의 도입없이도 안정적인 통화제도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영국안에 따르면 들로르보고서의 제 1 단계조치 이외에 유럽통화통합을 위한 더 이상의 인위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국가적 기구나 제도에 의존하는 제 2 단계 및 제 3 단계조치가 실현되면 통화통합은 다시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SCB를 도입할 경우 각국의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수행과정에서 배제된 채 결과에 대해서 책임만 지게되고, ESCB는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권한만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통화정책이 수행되면 각국이 준칙을 따르는 재정정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영국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발상은 좋으나 준칙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회계분식 등을 통해 각국 정부는 얼마든지 준칙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준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무런 실의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회원국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에 빠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국 측의 주장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 통합을 열망하는 다른 회원국들은 영국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국은 통화통합에 대한 태도를 바꿔 ESCB 대신에 그보다는 기능이 약한 유럽통화기금(EMF)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이 제시한 EMF는 ECU통화를 발행하는 주체가 되며, 제 1 단계에서는 EMF의 기금범위내에서 ECU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ECU표시 금융자산의 금리는 현행과 같이 ECU구성통화의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CU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지면 EMF의 기금한도에 관계없이 ECU를 발행하여 12개국 통화와 병행해서 통용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EMF에 대해서는 역외통화에 대한 시장개입 등 통화동맹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별가맹국의 통화정책권한은 여전히 당해 통화당국이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2) 프랑스와 이탈리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영국과는 달리 들로르보고서에 의거한 통화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로마조약을 수정하여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려는 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양국은 완전한 외환자유화조치를 취함으로써 영국의 ERM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상하 6%의 예외 적용을 받던 환율변동폭을 자진해서 2.25%로 축소함으로써 들로르보고서의 제 1 단계 완성에 의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단일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특정 국 통화를 기축으로 하는 통화동맹체제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는 근거에서 EC 전체의 공동통화인 ECU를 단일통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또한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역내시장에서는 환 투기의 예방과 이자율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통화바스켓이 아닌 단일통화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CU를 단일통화로 하기 위한 조치로서 ECU표시 단기금융시장을 육성하고 민간의 ECU 사용을 장

려하며 아울러 각국 중앙은행의 ECU표시 외환시장개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펴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역내국가 중 최강세 통화인 마르크 화를 중요시하므로 ECU에 의한 통화단일화를 통한 통화통합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CU로 통화가 단일화되면 이제까지 마르크 화가 누리던 기축통화로서의 이익을 잃게 되므로 독일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또한 ECU로의 통일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자본이동이 자유로와 각국 통화간의 대체성이 높아지면 거주자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므로 통화관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기도 한다. 더욱이 독일통일이라는 역내경제통합 작업이 더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유럽통합에 관해서는 아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요인도 있다.

독일은 단일통화제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들로르보고서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폴 독일연방은행총재는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창설이 긴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으므로 우선 찬성하는 나라들 끼리만이라도 중앙은행을 창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창설되는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국의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엄격한 준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정적 자구모와 그 재원보전방법에 관해서는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이 이와 같이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창설에 적극성을 지니는 것은 현재의 독일 연방은행의 위치로 보아 유럽중앙은행에서 독일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 하겠다.

(4) 나라마다 견해가 다른 이유

유럽중앙은행제도에 관해 이와 같이 나라마다 견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깊은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경제력이 차이가 나며,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창설에서 얻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최강세 통화인 마르크 화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기는 마르크 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창설일 것이다. 독일 연방은행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여 마르크 화를 단일통화로 유통시킬 수 있다면, 통화통합은 물론 경제통합에서 가장 중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르크 화가 가장 널리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으며, 또 독일이 그간의 실적으로 볼 때 가장 통화관리를 잘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을 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마르크 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여타국들이 찬성할 이가 없으므로, 독일은 유럽중앙은행창설에는 동의하면서도 ECU에 의한 단일통화화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로서는 들로르보고서대로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고 ECU를 단일통화로 할 때 잃을 것은 적은 반면 얻을 것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창설에 앞장서는 것은, 중앙은행창설 시 그 공을 인정받아 주도적 위치를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과 아울러, ECU에 의한 통화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독일이나 영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화폐 금융의 면에서 영국과 독일에 뒤떨어져 있음을 상기하면 이들이 통화통합에 적극적인 까닭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입장은 또 다르다. 영국은 대륙국가에 대한 오랫동안 지녀온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워 유럽통합이나 통화통합에 상당히 늦게 참여하였으므로, 이제와서 들로르보고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2류 국가로 전락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영국으로서는 그러한 위치를 감내할 의사도 필요성도 지니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오랫동안 파운드 화가 수행해오던 국제통화로서의 위치와 런던금융시장이 세계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영국이 대륙국이 주도하는 통화통합에 선뜻 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영국은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영연방을 유지할 필요에서 독자적 경제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 정치대국이 되겠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화주권을 포기하는 현행 통화통합방안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영국은 현재의 각국통화를 그대로 두어 역내시장에서 자유경쟁시킴으로서 자연적으로 기축통화가 출현되도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통화통합에서 얻는 이익과 비용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방식에 관한 의견일치를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유럽의 통화통합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더라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오히려 각국통화가 경쟁적으로 유통되는 체제인 자유은행업제도가 더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에서 회원국 통화간에 고정 환율이 항구적으로 유지된다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회원국 통화간에 고정 환율이 유지되는 것은 전혀 본질을 달리 하는 두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다. 첫째는 회원국 전체를 총괄하는 단일 통화당국이 회원국 통화간에 고정 환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통화정책을 평는 경우이다. EC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둔 통화통합은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이한 국가화폐간에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실질적으로 단일통화가 유통되는 것과 같아질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창설을 주장하며 유럽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단일통화를 유통시키도록 하자는 것은 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상이한 화폐간에 고정 환율이 유지되는 두번째 경우는 회원국 화폐간에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국의 통화당국이 발행한 화폐가 역내국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며, 주민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각국 화폐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다른 상품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화폐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각국 화폐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통화당국은 자국화폐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주민들이 자국화폐를 선호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국화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를 보유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각국 화폐간에는 균형환율이 성립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균형환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두번째 경우인 것이다.

두번째 경우에는 화폐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최적상태를 찾아간다. 중앙은행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발행시장에 하나의 경쟁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통화발행수입에서 통화발행비용을 차감한 통화발행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지닌 발권전담은행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점자로서 지녔던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통화간의 경쟁이 일어날 경우 균형환율은 어떠한 값으로 정해질까? 각국의 경제사정과 통화관리역사를 반영해서 균형환율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을 거치는 동안 각국 화폐의 특성이 유사해지면서 균형환율도 1 대 1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균형환율이 1 대 1이 되면 실질적으로 단일화폐가 유통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 온다. 은행권경쟁의 내용과 그런 경우에 거시적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이 지순(1988)을 참조하라.

첫번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두번째 경우에는 시장의 진화과정에 의해 단일통화가 유통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역내국가에서 단일통화가 유통되게 되면 화폐간의 교환이 불필요해지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단일통화로 표시되므로 비용이 절감되고 경쟁의 효율성도 제고 될 것이다.

III. 유럽통화통합의 문제점: 자유은행제도와 중앙은행제도

지금까지 우리는 유럽의 경제 및 통화통합에 관해 그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 중 통화통합에 관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내용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한국, 중국, 일본, 시베리아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통화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유럽의 통화통합과정을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통화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인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에서 은행제도의 자연발생적인 결과로 중앙은행제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정치력의 중앙집권화 과정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제도를 도입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유럽통화통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의 각국 중앙은행제도를 유지한 채 공동으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거쳐, 유럽중앙은행제도를 창설하여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이 업무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단계를 밟은 후, 마지막으로 유럽중앙은행에게 각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이양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유럽공동의 화폐를 창출해서 유통시키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공동화폐 역시 초기에는 각국이 발행한 화폐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다가, 차츰 역내 국가 간 거래의 주 매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마침내는 각국 통화를 완전히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통화통합 추진내용을 보면, 통화관리의 중앙집중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유럽중앙은행제도가 필요한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드시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럽중앙은행이 필요할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이한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공통의 단일화폐가 유통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중앙집권화된 유럽중앙은행의 존재가 꼭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화폐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국가라는 장벽이 허물어져서 서로 유럽이 하나로 통일된 경우를 상정한다. 즉, 회원국간에는 재화, 용역, 자본 그리고 인적요소의 이동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회원국주민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화폐만은 EC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12개의 화폐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고 하자. 종전의 각국 중앙은행을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이라고 부를 수 없으므로 발권 은행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러한 상황은 마치 한 나라 경제에 열두 개의 발권 은행이 존재해서 서로 다른 열두 가지 화폐가 병행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를 중앙은행제도에 대비해서 자유은행제도라고 부른다.

자유은행제도란 은행권의 발행 및 유통이라는 경제행위에 대해 자유경쟁이 보장되어 있는 통화제도를 말한다. 은행권발행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으며, 은행권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가격이나 유통량은 각 은행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자유은행제도다.

은행권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권 은행은 은행권발행에서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은행권 발행량을 조정할 것이다. 그런데 은행권에 대한 수요는 해당 은행권의 얼마나 충실히 교환의 매개물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는 은행권의 실질가치가 얼마나 안정적 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발권은행들은 자행권의 시장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딴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쟁의 결과 은행권의 가치는 시장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은행권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통화가치의 안정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은행이 수요되는 양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킨다면 그러한 은행권의 시장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은행권에 대한 수요가 감퇴되어 은행권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파공급된 은행권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그러한 은행권을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은행은 영업기반을 잃게 되고 정도가 심하면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발권 은행들은 자행권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은행 제도하에서는 통화의 지속적인 초파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요자 역시 공신력이 높은 통화를 선호할 것이므로 평소에 양화와 악화를 구별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공신력이 낮은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발권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라도 그 피해는 크지 않게 될 것이다. 특히 그런 한 은행의 파산이 금융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자유은행제도하에서는 통화의 가치가 시장의 내재적원 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정화되며 또한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이 통화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가져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경제통합과 더불어 통화에 관련해서는 자유은행제도를 허용하는 것 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여 동 중앙은행이 역내 통화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동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단일화폐로 유통시키는 대신, 현재의 12개국 중앙은행을 은행권발행 전담은행으로 전환 하여, 이들이 모두 같은 자격으로 상호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은행권 발행업무에 관한 기본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엄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본규범을 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된 EC의 통화관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화관리기관은 발권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앙은행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통화관리기구는 발권은행의 설립과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상이한 은행권이 병행해서 통용되려면 은행권간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권교환업무를 전담할 은행권교환소조직은 발권 은행 간의 공동노력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유럽중앙통화관리기구가 은행권교환업무를 맡아 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은행권교환소를 새로이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은행제도의 장점은 통화관리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이 은행권발행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여타정책 특히 재정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세를 이용하는 것

은 바로 중앙은행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자유은행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 통화관리가 여타정책수행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유은행제도하에서 통화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함은 그만큼 재정정책을 비롯한 여타 경제정책수행에 엄한 기강이 세워짐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에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수 없게 되므로 균형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도 다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규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타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수행을 위해 통화부문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작하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유은행제도하에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회원국은 지방정부로서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회원국은 이제 더 이상 자국통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 못하므로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역시 시장의 규율을 지키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어떤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은행권의 발행량을 늘린다면 이는 위에서 본 메커니즘의 작용을 통해 그러한 화폐의 수요를 떨어뜨릴 것이므로 임의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다. 따라서 화폐발행에 관한 한 지방정부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 역시 다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원리를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중앙은행제도를 창설해서 은행권발행을 중앙집권화하면 현재의 중앙은행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물론 각국 간 정책조정의 필요성이라는 추가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에 의한 독점적 은행권발행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며, 통화관리가 여타 정책수행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서 오는 폐해가 막심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행의 중앙은행제도가 지닌 통화제도로서의 문제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지 제도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문제에다 유럽중앙은행제도를 도입하면 각국의 경제정책수행을 상호조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아 반드시 정책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고 단일화폐의 발권력을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상황하에서 은행권발행이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타 정책에 대한 조정이 필요없게 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앙집권화된 통화정책이 그렇게 수행되기 힘든다는 데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한 나라에서 현재의 중앙은행제도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앙은행제도는 하나의 역사적 현실로서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자유은행제도가 아무리 바람직하다 해도 기존의 중앙은행제도를 없애고 자유은행제도로 전환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또한 이미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제도를 자유은행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대안으로서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관리를 엄격한 준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여타 정책과 통화정책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아직 중앙은행이 창설된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더 나은 대안인 자유은행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유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단 중앙은행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이를 되돌려 놓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앙은행제도가 자리잡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관련당사자들이 중앙은행제도에 익숙해져 있어 그 대안이 되는 제도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째, 대안을 생각하더라도 자유은행제도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은행권발행이 자유화되어 은행권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면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셋째, 자유은행제도가 실시되었을 경우 과도한 환율변동의 위험성이나 화폐교환에 수반되는 비용이 클 터이므로 자유은행제도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많다. 넷째, 주요회원국들이 유럽중앙은행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국의 주도권을 확대하겠다는 정치적 동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통화간의 경쟁을 허용할 때 환율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하는 점과, 상이한 화폐가 공존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화폐간의 교환비용이나 계산상의 복잡성이 가져다 줄 문제라 하겠다. 이중 환율의 과도한 변화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은행제도가 정착되면 시장균형에 의해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발권은행이 자행권의 시장가치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유인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유은행제도가 정착되어 은행권의 시장가치가 안정적으로 정해지고 따라서 은행권간의 교환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상이한 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계산비용이나 거래비용은 최소화된다. 더욱이 현대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비용은 무시할 정도로 적어진다. 따라서 거래비용이나 정보비용의 존재를 들어 은행권간의 경쟁을 기피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은행권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주로 통용되는 화폐가 존재할 것이다. 일종의 최적통화지역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적인 이유로 해서 주로 현재의 국경을 바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주로 파운드 화가 통용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영국의 주민들이 언제라도 다른 통화를 쓸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파운드 화의 불규칙한 공급으로 인한 통화가치의 불규칙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파운드 화가 그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통화, 가령, 독일의 마르크 화가 파운드 화를 대체할 것이다. 마르크 화 발권은행이 영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마르크 화의 유통을 확대하려고 호시탐탐하고 있을 것이므로 파운드 화의 공급도 시장경쟁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다.

또한 자유은행제도하에서는 화폐간의 교환이 그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이다. 현행의 화폐제도하에서 화폐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외국의 통화가 자국내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인데 상이한 화폐가 경쟁적으로 유통되는 상황하에서는 구태여 특정화폐의 보유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처분할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발권은행들이 은행권교환소에 참여하여 순수지차 만큼 만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화폐의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교환거래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보면 유럽중앙은행제도를 창설하는 것보다 현행의 각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유통시키는 자유은행제도가 여려 가지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도 새로운 중앙은행제도를 창설하는 유럽중앙은행제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통화간의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을 창설하여 단일화폐를 유통시키는 유럽의 통화통합에 관해 현재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까지 유럽 통화통합의 진척상황과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 본 후 통화통합의 대안으로서 자유은행제도에 관해 고찰하였다. 자유은행제도란 여러 개의 발권은행이 서로 다른 은행권을 발행해서 경쟁적으로 유통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유럽의 경우 회원국이 통화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해서 단일 통화를 유통하는 대신, 현재 각국 중앙은행을 그대로 두고 그들이 발행한 화폐를 자유롭게 경쟁시키자는 것이 자유은행제도의 기본 주장이다. 이는 현재 유럽통화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 제도의 창설과는 대립되는 제안이다.

자유은행제도를 주장하는 논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인위적인 장치를 통하지 않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통화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 간의 시장경쟁을 통해 어느 누구도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중앙은행 간의 정책협조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유럽 통화제도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화폐를 발행하는 가운데 환율조정메커니즘을 통해 중앙은행 간에 정책협조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종의 통화 카르텔에 해당된다. 카르텔은 그 속성상 불안정적인 경제제도다. 회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될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카르텔에서 이탈해서 독자적 행동을 추구할 유인을 지니므로, 카르텔이 영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아주 힘든다. 카르텔을 유지시키려면 회원의 개별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독립된 주권을 지닌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카르텔이 그러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유럽 중앙은행제도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카르텔의 문제점을 독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근거한 것이다. 즉,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통화주권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해서 유럽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단일 유럽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대로 유럽 중앙은행

제도를 창설할 수 있으면, 현재 노정되고 있는 유럽 통화위기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제는 회원국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통화주권을 포기하고 유럽 중앙은행제도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있다.

자유은행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은 이에 반해 통화카르텔 및 통화독점 모두 바람직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에 적으므로, 현행의 카르텔을 파기하고 경쟁체제로 이행하자는 주장이다. 카르텔은 언제나 그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기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점으로 이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독점에는 독점의 폐해가 따르며, 다른 어떠한 상품보다도 화폐발행의 독점이 가장 큰 부작용을 놓기 때문에 통화독점에 반대하는 것이다.

유럽경제통합을 도모함에 있어 인위적인 통화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간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자유은행제도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유럽지역이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통합되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면 단일 통화의 이점이 통화독점의 폐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단일 통화보다는 경쟁적 통화제도가 더 나은 제도라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대외정책연구원

1990 『EC통합과 정책대응』

민총기

1990 『EC 경제통합과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EC 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웅

1992 『유럽금융통합과 EC 금융시장 진출방안』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지순

1990 “자유은행제도의 기본원리” 『경제논집』 제29권 제4호.

한국은행

1990 『EC 통화통합논의의 주요내용과 전망』

한국은행

1991 『EC 경제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Googhart, C.

1988 *The Evolution of Central Bank*, MIT Press.

Hayek, F. A.

1978 *Denationalization of Mone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Smith, V.

1938 *The Rationale of Central Banking*, P. S. King Press.

White, L.

1984 *Free Banking in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netary Integration in EC and the Free Banking System

Jisoon Lee

Monetary integration has been pursu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building an integrated Europe by the end of this century. The goal is to build a European Central Banking system. In this system the central bank would issue a single currency which will replace all the existing national currencies. The central bank would also have monopoly rights to control the supply of the single currency in the region. In order this system to be workable, each member country should give up its sovereign power concerning monetary matters.

The efforts, however, have not produced any visible results except for the maintenance of the exchange rate mechanism. Even this is confronted with a serious challenge as the necessary policy coordination among member nations has become difficult. It is evident that each country is very reluctant to give up its monetary sovereign power.

These problems then suggest that the approach toward monetary integration through centralization of the money issuing business may not be the optimal solution. In this paper I propose an alternative system. In this system instead of establishing a new central bank, all the existing national central banks will be allowed to issue their own currencies. However, citizens are allowed to use any currency they want. Therefore, central banks should compete among themselves as competitive money issuers. It is called the free banking system.

In a free banking system each participant competes for market shares. A currency that is most convenient to use and is best able to maintain its value would fetch the largest market share. Thus each national bank has an incentive to carefully regulate the supply of money so that its value be maintained at the stable level. As a result in a free banking system the supply of money is self-regulated by the market system and the value of money is also automatically maintained at a stable level. Therefore, the free banking system may be a better alternative to the monopoly central banking system.